

올림픽, 평화,  
'*Primum non nocere* (first, do no harm)'  
그리고 하늘의 별

평창에서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대하게 치뤄졌다. 어떤 이들은 올림픽이 여전히 국가·민족주의에 기대고, 힘에 대한 동경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국가 간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올림픽은 종종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는 감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던 남북한 간에 평화의 불꽃을 지피더니 그 기운은 나비 효과의 날갯짓처럼 한반도를 넘어 동북 아시아와 세계로 퍼져나갈 기세다. 그러한 기운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다면, 이번 평창 올림픽은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올림픽의 이념을 가장 잘 실현한 올림픽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올림픽이 인류의 평화, 발전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윤리 현장은 독립성의 보호, 자율성의 보존, 일체의 차별에 대한 저항, 남녀평등의 원칙, 금지 약물의 복용과 각종 부패의 금지와 청산, 그리고 정치적, 상업적 남용

에 대한 반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경기 참여자의 땀방울, 투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승리와 패배 모두에 감동하는 까닭은 참여와 경쟁이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비단 올림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구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보건사회연구』 권말에는 연구윤리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게재하였다. 이것은 새롭게 개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윤리적 원칙들을 투고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종래 자연과학 위주로 적용되던 연구 윤리가 사회과학을 포함한 전 학문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와 과학이 거대화 되면서 연구 주제의 선택, 시행, 출판 등이 큰 권력과 자본을 가진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거대과학’ 앞에서 취약한 인간/시민은 상대적으로 더욱 왜소해지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연구들이 아예 시행되지조차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김동광은 데이비드 헤스(Hess, 2007)의 말을 빌려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중요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체계적인 지식의 비생산(nonproduction of knowledge)에 따른 구조적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무지(ignorance) 역시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된 무지’, 또는 ‘강요된 무지’라는 것이다(김동광, 2010). 따라서 우리는 시행된 연구의 연구윤리 뿐만 아니라 ‘시행되지 않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향후 『보건사회연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규정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최근에는 동물 등에 대한 연구)는 윤리적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연구자 자신에게 있다. 연구윤리는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과 1964년 헬싱키 선언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제도화 되었다. 하지만 사실,

윤리적 강령의 탄생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이다.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Primum non nocere*, first, to do no harm)”라는 말은 이미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아니,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률(*Der bestimmt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Gesetz in mir*)”을 이야기한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맞다면, 윤리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이 처음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시행한 연구의 절차적 윤리뿐만 아니라 연구의 주제의 결정과 시행, 출판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활동이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극적으로 우리 연구가 누구에게 복무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할 북극성과 같은 별이 있다면 그 별에 새겨져 있을 말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Primum non nocere*, first, to do no harm).”**

2018.3.31.

편집위원장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김동광. (2010). 상업화와 과학기술지식의 생산양식 변화. *문화과학*, 64, pp.327-347.

Hess, D. J. (2007). *Alternative pathways in science and industry: Activism, innovation, and the environment in an era of globalization*. MA: MIT Press Cambridge.